재정운영 건전성 강화한다

전북자치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방안 논의… 운용평가 결과 적극 반영키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 보조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202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정책회의에서 내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3~6월)의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 확립됐다.

이를 통해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의 실제 성과와 활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강화하여 기존의 평가등급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외에도 '매우미흡' 등급을 신설 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도 강화하여, 종전 성과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10%이상 삭감에 그쳤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미흡'의 경우 20% 이상, '매우 미흡'의 경우에는 30~50% 삭감하거나 폐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총 156개 사업에 대해 126억원 삭감을 권고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도 강화해, 예산 편성 전 보조금 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 성과 달성 가능성, 그리고 사업 수행 단체의 성격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원 분담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부적절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보조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7월~9월, 약 2달간에 거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전 과정(교부·집행·정산) 실태조사를 추진 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개선 사항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간 보조사업자를 위해 오는 27일 전북자치도 공연장에서 보탬e 시스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대한방직 부지 기본계획 변경 절차적 문제 곳곳에서 드러나

오현숙 전북자치도의원, 긴급 토론회 열고 대책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24일 '(구)대한방직 부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오현숙 의원,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오현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잘 반영하여 개발이익을 전주시민께 최대한 환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은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 심의의 배경이 민간사업자에 의한 구체적 개발사업의 추진과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변경해 용적율 500%의 초고층 공동주택 건설계획 적절성 검토 △지하에 대규모 판매시설 설치하면서 공개공지로 감정평가한 부분 등 종전평가는 높이고 종후평가는 저평가해서 전주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을 축소 △공공기여량 2,380억원 중 1,000억원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투입산정 △동시착공 동시준공은 강제할 수 없는 점등 전주시 졸속행정에 대한 도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는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 미래상과 추진전략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며 "대한방직 대상지 주변에 대한 생활권역으로 보는 인구, 기능, 활동계획의 성격에 맞는 포괄적인 방향제시와 상업용지와 주거용지를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른 결과가 달라서 용도 배치의 세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공공기여금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이며 전문영역이긴 하나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 차이가 날 수 있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마당에 지금의 감정평가가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 소속 11개 감정평가법인의 짜맞추기 감정 의혹 등을 제보를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감정평가 법인 다수의 합리적 문제제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공공 기여량을 정하는 협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 심판이 선수로 뛴 감정평가서는 재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문옥 사무국장은 "전주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 실현 불가능한 이유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서 나오듯이 자산이 1조3,079억원, 부채 1조 3,362억원 순자산은 마이너스 286억원으로 현재무상태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총사업비 6조2,000억원)을 추진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자광의 약 2,350억원의 PF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PF재평가가(대출연장) 다음달 12일~14일에 진행될 예정인 만큼 오는 26일에 있을 전북자치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이번 재평가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예결특위 등 새로 구성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5일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창군 풋살장 조성사업' 등 주요사업장 13개소를 현장 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이선덕 의원) 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발의: 박성만 의원) 등 3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발의: 임종훈 의원) 등 13건 이상 상임위원회 소관 46건과 본회의 소관 결의안 등 5건, 총 51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한편, 첫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으며, 본회의 직후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민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각종 안건 심사와 더불어 우리 군의 주요 사업장들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일정이 포함된 회기로, 우리군의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에서 세심한 관찰과 논의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함께 도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 긴급대토론회

"뉴라이트 국가개조구상 저지"

역사 정통성 수호 의지 다져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행사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지난 23일 민주연구원과 1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해 뉴라이트 국가개조구상 저지를 위한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행사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었다.

행사는 8·15광복절을 계기로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용산에 일제 때 밀정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직격하고, 뉴라이트 인사들이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및 역사 관련 국책기관에 임명되는 사태로 뉴라이트 문제가 전면화되면서 이들의 노골적인 국가개조구상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제1부에서는 만민역사공동회 형식으로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하여 역사 관련 시민사회 원로들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뉴라이트가 포진한 역사 관련 국책기관장을 역임한 역사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긴급대토론회로 이어졌다.

행사를 민주연구원과 공동주관하고 주최한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뉴라이트의 본질을 첫째 일제강점의 불법성 불인정, 둘째 일제의 반인도적 범죄 불인정, 셋째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불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뉴라이트는 일본 극우의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라이트는 냉전이념을 앞세워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일군사동맹화를 추구한다고 분석했다. 이들 일본 극우의 분견대 역할을 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의 역사 훼손과 친일로의 국가개조 구상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며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임을 강조했다.

행사를 공동주최 주관한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 없는 한일관계는 결국 일본을 과거 군국주의로 부활하는 재료밖에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한일 과거사 문제 정지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뉴라이트가 민족 정기에 대못을 박고, 국가의 기억을 조작하려는 거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신을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인 역사 쿠데타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토론회를 주최 주관하고 토론자로 참여한 정동영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이래 최대인 국회의원 116명이 공동주최하고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워진 역사 관련 전직 국책기관장들이 총망라해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발언과 토론을 이어간 것이야말로 뉴라이트들이 도발한 역사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반민특위가 작동해서 100만 명을 체포하고 10만 명을 처벌한 프랑스 반나치 처벌처럼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했다면 우리 국민이 민주화와 선진화를 위해 치르지 않아도 될 희생이 없었을 것"이라며, 역사 정통성 수호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재까지 목표액 25% 수준에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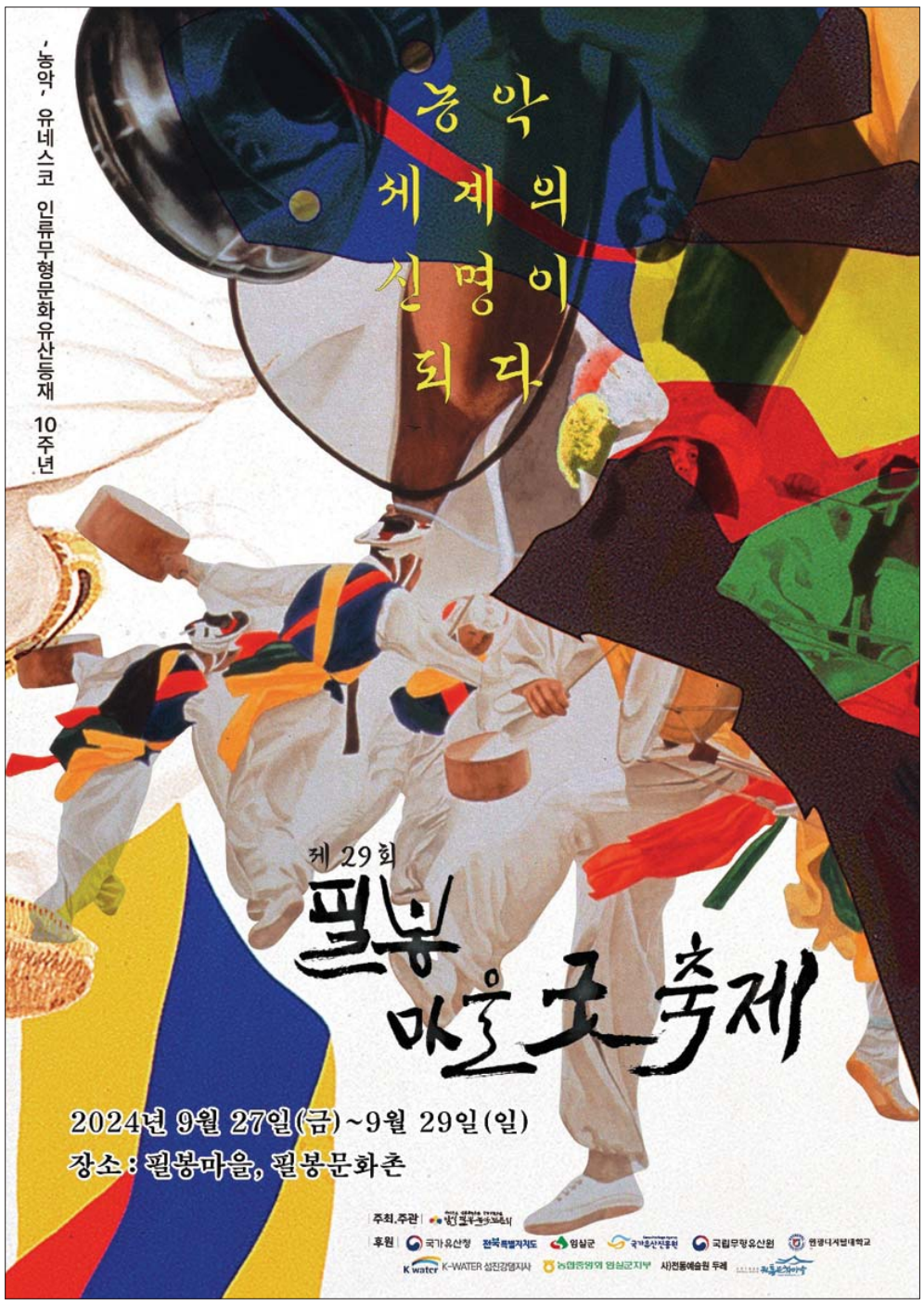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지난 2017년부터 농어업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기업의 출연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어 민간기업의 출연실적이 공공기관보다 훨씬 저조하다.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을 비롯해 10위 그룹까지 지난 8년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총 출연액은 각 그룹의 작년도 매출액과 비교하면 0.01%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내·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449억원으로 집계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어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에 기금 용도를 명시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농어촌 지역과 함께 가치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실제 조성된 금액은 2,449억원(24.5%)에 불과했다. 특히 민간기업 중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경우 작년 한 해의 매출액은 358조원을 넘었지만, 정작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출연조차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고작 86억원(0.002%)에 불과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농협 등 재계서열 1위~10위까지의 그룹이 같은 기간 출연한 금액 역시 작년 매출액 대비 0.003%인 470억원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금(1,495억원)의 31.5%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